

# 대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에 맞서 일터와 삶터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자!

박근혜 파면과 함께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이 열렸다. 민주당은 치열했던 경선의 후반전에 돌입했다. 호남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문재인과 안희정 간 감정대립이 거세다. 이재명도 문·안 두 후보를 비판하고 있지만 부피가 커진 양강구도에서 길을 찾진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경선을 거치고 있으나 관심도는 한참 떨어진다. 부역세력 심판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크고, 촛불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보인 모호한 태도 탓이다.

이외중에 자유한국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막말러 홍준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언급했다. 이에 유승민은 “합당은 됐고 보수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역자들과 단일화도 할 수 있다면 합당은 못할 게 뭐가? 보수세력 내 주도권 다툼을 위한 궤변일 뿐이다.

어지럽게 흘러가는 정치판을 보니, 촛불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확인 된다. 작금의 대선 국면은 촛불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천만 촛불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 적폐 청산 의지 보이지 않는 대선 주자들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삼성맨 양향자는 반도체공장 재해 유족과 ‘반올림’을 근거 없이 매도해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김호기 역시 삼성의 기만적인 보상과 은폐에 협조한 바 있고, ‘박근혜 가정교사’ 김광두는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중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런 인물들을 영입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뿐만 아니다. 주위에 삼성맨들이 즐비하기 때문인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착취, 반도체공장 노동재해, 반헌법적 무노조 방침 등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자행해온 행위들을 어떻게 근절시키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무하다.

그사이 보수언론들은 재벌 구속과 출국금지가 ‘과하다’며 군불을 떴고,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래서야 재벌 체제를 혁파할 수 있겠는가?

말로는 빈익빈부익부가 심각하다면서 정작 공약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안희정·유승민 등은 공공연하게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명박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대안으로 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년센스다.

### 가짜 대안에 맞서 촛불을 들자

탄핵안 가결과 이재용 구속, 파면을 관철시킨 것은 촛불의 힘이었다. 진짜 민주주의는 광장에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꿈수들을 무너뜨려왔다. 촛불의 뜻을 이으려면 어떤 대선을 치러야 할까?

첫째, 박근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의제가 관철되는 대선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벌들이 정경유착과 착취의 파티를 벌일 때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 ‘경제를 위해’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 등 공범들을 봐주자는 엄살을 허용해선 안 된다. 재벌가 돈 잔치 끝에 우리의 삶이 나아졌나? 오히려 반대다. 그들의 ‘경제’엔 우리의 삶이 없었다.

둘째, 재벌왕국·빈익빈부익부 척결을 위해 일터와 삶터에도 민주주의를 일구는 시간이어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을 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행동을 할 의지와 힘이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조 할 권리가 있어야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국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셋째, 이명박근혜 9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노동을 후퇴시키기 시작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의 적폐를 돌아보는 대선이어야 한다. 성찰이 있어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낳았다는 지적을 무시해선 안 된다.

지난 3월 11일 광화문은 아름다웠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과 자신감이 광장을 가득 채웠더랬다. 이를 잊지 말자. 대선주자들의 이전투구에 휘둘릴 필요 없다. 여의도와 청와대가 적폐 청산과 사회변혁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언제든 촛불을 들고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이고, 그래야 주권자다. ●

### 더 알아보기

- 박근혜 적폐 청산 과제에 대해서는 ‘게이트 특별페이지(pssp.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선 후보 공약·정책들에 대해서는 월간 《오늘보다》 4월호(todayboda.net)와 4월 초 발간될 《대선정책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내 일터와 삶터를 바꾸는 촛불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의 촛불은 골목 곳곳 일터와 삶터로 확대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여름엔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졌다. 군부독재하에 머리 길이까지 단속 당하며 저임금의 비참한 삶을 살던 노동자들이 “내 직장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2017년의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

요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곳곳에선 ‘과로사·무료노동’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만 여섯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촛불이 한창이던 지난 11월에도 넷마블 20대 노동자가 돌연사 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며 무료노동을 시켜도 칼퇴근은 꿈도 못 꾸다. 1980년

대 구로공단 여공들이 일하던 자리에서 2010년대의 청년들이 창백한 얼굴로 졸음을 쫓으며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법이라고 지켜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공단의 불법파견을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제조업에서 파견업체를 낀 고용은 불법이지만, 실제론 성행한다. 파견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른 고무줄 잔업, 휴업, 실직과 구직에 익숙하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불법파견 고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체 17곳이 처벌을 받고, 647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내 삶의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어쩌면 광장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을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 반중감정 이용해 사드 배치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던 사드 배치가, 4월 내 작전 운용 예정이 되어 줄속 추진되고 있다. 사드도 탄핵 당할까봐 서둘러 ‘알박기’에 나선 것이다.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 제재 · 한국 단체 관광 금지 등, 사드배치에 잇따른 중국의 경제제재와 반한감정 고조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진다. 보수정치인, 언론은 절대 중국에게 굽히지 말자고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듯이 우리 안보에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며, 조기 배치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아직도 우리를 속국으로 아느냐”며,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중국의 경제제재와 민족감정 부추기기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

러나 그렇다고 사드 배치가 우리에게 선(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익 없는 사드 배치 추진이 가져온 갈등 아닌가. 막대한 불편과 위협받는 평화를 책임져야 할 것은 바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박근혜,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보수정당과 보수언론들이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은 당연했다. 그런데 마치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양 중국의 제재를 선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기들은 결백한 척하고 있다. 날치기 배치 현실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사드 배치 주장은 상식이 아니라 무책임한 기만일 뿐이다. 우리 목표가 중국을 이겨먹고 ‘속국 과거’를 양갈음하는 것인가? 기어코 미

사일들이 우리의 삶터로 날아올 때까지 상황을 밀어붙이고, 그때 가서 어떻게든 미사일 하나라도 더 요격했음을 자랑스러워 할 것인가? 계속되는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감내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일인가. 사드 배치 철회는 현상유지 이상의 의미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군비 경쟁, 북한을 빌미로 국민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상황을 이미 지겹게 겪어왔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휩쓸리는 것을, 실익 없는 정책들을 북한 탓으로 정당화하는 기만을 거부하자. 사드를 거부하는 것이 시작이다. 성주·김천·원불교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사드 철회가 평화, 사드 철회가 민주주의임을 외치자! ●



**성주 소성리로 떠나는 2차 평화버스**  
- 4월 8일(토)  
- 사드를 막아내고 평화를 지키는 길에 함께해주세요!  
**사드 배치 반대 긴급서명**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 3월 26일 마감  
- [wouldyouparty.org/petitions/47](http://wouldyouparty.org/petitions/47)

## 세월호 인양, 진실과 안전의 길로 나아가자

1073일 만에 드디어 세월호가 물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정부와 집권세력은 구조 실패, 인양 지연, 유가족 매도, 특별법 제정 방해, 미흡한 시령형 제정, 특조위 조사 방해, 특조위 강제 해산, 특검 외면, 책임자 처벌 외면, 안전 규제 외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한 것이 없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세월호는

중요한 대통령 탄핵 사유였다. “이제 그만 잊으라”는 권력자들에게 촛불은 “아직 잊을 수 없고, 잊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족들을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인양을 반대하며,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 취급했던 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널려있다. 그들의 말을 띄워주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

을 했던 조중동과 공영방송은 진심 어린 반성도 없이 모든 것을 박근혜 탓으로 돌리며 한마디씩 보태고 있다. 저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망발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시작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인양 과정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한다. 선제조사위원

회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본 방향이다. 가슴마다 노란 리본을 달았던 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함께 진실을 밝히고 안전 사회를 만드는 길로 나아가자. ●